

광주시 '이민자 유입·정책' 포용도시 만든다

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5대 전략·12대 추진과제 등 마련 인권센터 개설·유학생 지원 확대 "지역특성 맞는 유치·지원책 개발"

광주시가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7일 광주시는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광주시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를 열어 '제1차 광주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4-

2028)'에 대해 심의, 확정했다.

광주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 지원 기관·단체 대표, 외국인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에서 '이민자와함께 글로벌 포용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5대 전략은 △문화다양성 기반 소통으로 상호포용 환경 조성 △이민자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 △이민자 인권증진 및 보호 △이민자와 함께 세계 도시로 도약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10대 핵심과제로 △글로벌시민 인식 개선 △이민자 인권센터 설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역할 강화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유학생 정주 지원 확대 △취약이민자 보호 강화 △지역수요 기반 광역형 비자 설계 △현장소통형 정책 거버넌스 △해외인력 성장체계 마련 △글로벌 도시 브랜드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광주연구원에 외국인정책을 현안 연구과제로 의뢰하고,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협업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세부사업 발굴 등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지원 기관·단체, 광주시 관계부서 담당자,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지역 외국인주민수는 2023년 11월 기준 4만6859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

평균 7.8%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해외인력 도입 쿼터와 신규 허용 업종 확대 등에 따라 앞으로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유치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올해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전국 광역지자체 유일 선정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치 호평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한국훈련 포상은 중앙부처를 비롯해 총 1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광주시가 선정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재난유형에 대비한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단위 훈련이다.

광주시는 올해 평동역에서 풍수해 및 도시철도 대형사고를 가정해 광산구, 교통공사와 합동으로 시범훈련을 실시했

다. 소방·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드론, 구조장비 등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재난대응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생동감있게 훈련을 실시해 시민들과 평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지침서(메뉴얼)를 훈련 기획·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국민체험단 훈련 참관 및 평가, 불시·돌발메시지를 전달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기관·부서의 신속·유기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기관장을 비롯한 훈련 참여자가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유관기관·민간단체의 적극 참여로 비상기구별 실천대응능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이번에 받은 포상금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안전 지원,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쓸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왼쪽에서 4번째) 광주시장, 5·18 단체, 종교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오른쪽에서 네번째) 국회의장을 만나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책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우원식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꼭 추진"

강기정 시장·오월단체 접견 "광주정신, '빛의 혁명' 계승"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정집무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및 5·18관련단체를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 시장을 비롯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스님, 박상규 한국기독교교장교회총회장, 정석운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독재자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되는 '국민의 나라'라며 "지난 12월 3일,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정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그 뜻을 받아들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광주의 오월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6월 항쟁과 촛불 혁명, 그리고 이번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

는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80년 5월 광주의 주먹밥 나눔이 여의도 국회의 음식점·카페 선결제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광주정신'으로 이어졌다"며 "내년 5월 광주를 방문해서 5월 영령들께 인사드리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설집을 우 의장에게 선물하면서 "절체절명의 위중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계엄을 저지해준 우 의장에 감사하다"며 "국민들도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농업박물관, 21일 '동짓날 민속체험행사'

전남농업박물관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명절인 동짓날 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오는 21일 '동짓날 민속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한 해의 끝에 해당하는 절기다. 옛 사람들은 동지를 경사스러운 날로 여겼으며, 현대에서도 동짓날에는 팔죽을 쟁겨 먹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지도도 높은

절기다.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박물관 쌀 체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선착순 70명을 선정해 동짓날 민속 알아보기와 동지팍죽 만들어 먹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전남농업박물관 누리집(http://www.jam.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오지현 기자

어린이농부이화, 이담과 함께 나주배의사계를 느껴보세요!

어린이 농부 이화, 이담과 함께

MISSION: 인공수분하기! 배꽃에 꽃가루를 묻혀줘!

나주배의 사계를 느껴보세요!

MISSION: 열매 숙기! 작은 열매를 숨여내!

MISSION: 열매 수확! 맛있게 자란 배를 따!

MISSION: 가지 치기! 나뭇가지를 정리해!

나주 배박물관

(동절기) 09:00 ~ 17:00
(하절기) 09:00 ~ 18:00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휴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